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와 과제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의 저항과 근대화 운동으로 거슬러 간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민주주의 운동은 남한(대한민국)에서 발생한 1960년대 이후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주도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한 정치, 사회운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1. 산업화와 민주화

1960년대 이래의 한국 산업화는 약 30년에 걸치는 기간 내에 세계 경제사에서 매우 드문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루어 냈다. 비단 일인당 국내생산액(GDP)과 국민소득의 성장률에 있어서 경이적일 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성공적 고도화로 한국은 이 기간 내에 낙후한 주변부 농업국가에서 세계 주요 산업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식민지 근대화 이래 뿌리 깊은 한국인의 세계에 대한 불신, 경계, 적대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한류라고 불리는 문화현상과 한국대중문화의 해외 확산은 한국인의 자기 긍정과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도 세계의 주류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은 많은 한국인에 있어서 새로운 감격이다.¹

한국인의 자부심의 또 다른 주요한 원천은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민주화운동과 이의 결과로서의 한국민주주의다.

1 2007년 8월 한국사회는 심형래 감독의 디 워(D-WAR)라는 대중영화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목도하고 있다. 이 논쟁은 미국 소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대중적 열광과 이 현상에 대한 경계와 비판에 관한 것이다. 이는 2005 겨울에 전개되었던 황우석에 대한 대중적 열광과 이에 대한 비판과 일정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계속된 권위주의 정부는 1987년 최고조에 달한 시민적 저항에 봉착하여 마침내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동의하였다. 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매우 점진적으로 그러나 마침내 이루어졌다. 노태우, 김영삼이 이끄는 10년에 걸친 2개의 과도기 정권을 거쳐 1997년 민주화운동의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그 자신 반군부권위주의 투쟁의 주요한 일원의 하나였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민주화는 마침내 완성된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그로부터 5년 후 역시 민주화운동의 광범한 지원을 받은 노무현이 당선되어 이른바 ‘민주개혁’ 정부가 2회 연속 집권함으로써 한국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이 정착된 것으로 보였다. 한국은 성공적 산업화와 근대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세계의 희귀한 성공사례가 되었다.

이제 한국이 아직도 풀어야 할 20세기의 유일한 유산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강제된 분단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성공적 해결이 이루어 질 때 한국은 근대의 모든 과제와 비극을 극복하고 외부세계와 완전한 화해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로의 직접적 이행의 계기가 된 87년 6월 항쟁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자발적 시민혁명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전체 참여계층과 집단을 통제하고 지도한 정당이나 정치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6월 항쟁의 물결이 지나간 후 대중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명칭으로서의 재야운동은 8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영구히 분열되었다. 한국을 구성하는 몇 개의 주요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성정당은 신규 정치엘리트의 충원 통로로 이 분열된 민주화운동을 사용하였다. 운동가들의 조직인 민주노동당, 민주화운동과의 친화성이 강한 집권정치세력 뿐 아니라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의 주요한 지도자들도 민주화운동 출신이 상당수 존재한다.²⁾

87년 이후 점차적으로 ‘거리의 투쟁’은 투표소의 경쟁으로 대체되었다. 흔히 ‘87년 체제’라고 이야기 하는 87년 이래의 정치, 사회적 상태는 민주화세력과 구 권위주의 세력이 공존하면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

2) 한나라당을 탈퇴하고 지금은 범여권의 일원이 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7,80년대 재야와 노동운동의 주요한 지도자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재오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었다.

97년 이래 2개의 연속된 민주개혁 정권이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의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³ 87년의 시민혁명은 구세력을 축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민주화세력은 안정적인 정치적 주도권을 창출하는데 실패하였다.

87년 이후 20년이 경과한 2007년 대선에서 구세력은 재집권할 수 있는 유리한 전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권 교체를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관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와 복고주의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인가는 주요한 논쟁점을 이룬다.

결국 지역주의와 보수주의(다분히 반공주의)는 아직도 가장 강력한 담론으로 존재하고 정책정당과 정책토론은 한국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⁴ 이런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미발달로 인하여 모든 민주적 제도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의 하나이다.

3. 권위주의의 해체와 평화체제로의 진전

87년 이후를 관리한 4개 정권하에서 속도와 강도의 차이에 불구하고 권위주의의 해체와, 한반도 냉전체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이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아직 진보진영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폐기 혹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법치국가 인권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을 의심할 수는 없다. 역대 정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정보기관, 정치경찰의 권한을 극적으로 폐기하고 축소하였으며 권한남용을 처벌하였다. 한국에서 그간 상식으로 여겨진 불법도청의 책임을 물어 전직 국정원장들이 노무

3) 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시대 집권세력의 일원이었던 김종필과 연합하여 이른바 DJP 연합을 통하여 불안한 의회내 다수를 형성하였으나 DJP연합이 와해되면서 바로 소수세력으로 전락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실패한 야당의 대통령 탄핵 시도 이후 실시된 총선에서 단독 원내 다수세력을 형성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수차의 보궐선거에서 실패하여 다시 소수당으로 돌아갔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는 현재 야당이 장악하고 있다.

4) 한국정당사에서 가장 격렬하였던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 후보자의 자질론으로 시종일관하였으며 정책토론은 거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현 정부 하에서 사법처리된 것이 좋은 예다.

또한 1995년부터 대량으로 이루어진 정부와 민간의 대북경제지원으로 시작되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점에 달한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이후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민족문제를 유연하고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민주화 진영의 오랜 요구와 의지를 정권이 수용한 것이었다. 2007년 대선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이나 어느 경우에도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큰 흐름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4. 진보적 대안의 모색

그러나 사회경제정책과 사회적 갈등의 조정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정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상 북한 핵문제보다도 사회적 이해갈등의 조정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정책의 설정이었다.

권위주의적 국가기구의 해체와 축소, 법치주의의 확립,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새로운 환경 하에서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었던 모든 형태의 정치, 사회적 요구가 급진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 하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이러한 억압된 요구의 과도한 분출이 국가와 사회를 무정부상태로 몰아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모든 권위주의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한국사회 역시 만만치 않게 치르고 있으며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한국사회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는 여부와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과도기가 지나치게 길다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느낀다는데 있다. 한국노동자운동의 대표자 격인 현대자동차노조는 87년 이래 매년 파업운동이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특히 2007년 초의 파업은 국민 일반의 격심한 비난에 직면하였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총파업 역시 사회적 호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실패하였다. 한국인은 전통적인 공동체적 질서와 근대에 와서 이를 변형한 권위주의적 질서에 익숙한 편이다. 한국사회는 노사갈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적 이해관계와 공동체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고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방법에 관해 전혀 생소하다. 한국인에게 한겨레신문의 필자들이 프랑스의 파업과 프랑스 시민들이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당연한 것으로 인내한다는 것을 계몽적으로 소개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재의 대립적 노사관계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노사협조주의가 다 같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한 지속가능한 한국형 노사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각종 지역개발과 환경시민단체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이해갈등 전반에 걸쳐 다 같이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실질적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국 정치적, 사회적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대화와 타협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분쟁의 조정장치로서의 과거의 강압적 국가권력을 대체한 것은 사법권력이 되었다.

한국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 도입에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치력의 배양,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성숙한 단계로 진일보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운용할 수 있는 일상적 능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갖추어 한국사회는 ‘87년 체제’를 진보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 사회통합형 한국적 사회경제체제의 구상으로 집약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1)영미형 2)대륙형 3)북구형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보수적 이론가들은 영미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대륙형과 북구형을 저울질하고 있다. 영미형의 성공사례로는 아일랜드가 대륙형은 네덜란드, 북구형은 덴마크, 스웨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대륙형의 하나로서 독일 모델 역시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다. 한국에 적용가능한 21세기형 사민주의 모델이 발견된다면 이는 크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진보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 진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할 때 한국사회는 보수적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87년 체제’의 보수적 수정이나 진보적 수정이나의 갈림길에 서있다.

5.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2년 전에 발생한 87년의 한국민주화는 한국에서의 냉전질서의 일차적 붕괴를 의미한다. 이후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을 거쳐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87년 6월항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아울러 성공적인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추진된 산업화의 근저에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냉전시대의 논리가 작용했다. 지극히 공격적이고 군사주의적으로 진행된 이 산업화의 와중에서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는 심대하게 훼손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수립되었다. 87년의 민주화 이후 그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의 명분아래 훼손된 가치의 회복과 피해의 복구작업이 느리지만 착실히 진행되었다. 고도성장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한 국가주도 시장경제는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 등장한 세계화 시대 속에서의 적응실패로 결국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표준(Global Standard)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90년대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의 보수화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독일사민당에서 한국의 민주개혁세력에 이르기 까지 크나 큰 도전이다. 1997년 이래의 민주개혁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적 양극화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일면으로는 시장개방, 규제완화 다른 면으로는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한미 FTA체결로 나타나는 시장개방 정책은 좌파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였고 적극적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은 우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시장개방은 농업 분야를 위시한 국내 취약산업의 피해와 이를 보상하는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고 있고 노령연금을 위시한 사회보장 부문에서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같이 현재 통일 이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예산 역시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에 따라 더욱 많은 재정수요가 예상된다. 사회복지와 대북지원에서 대량의 신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에 반해 2000년대에 들어 한국은 더 이상 고도성장 국가가 아니며 중국과 동남아와의 경쟁과 산업이전으로 인한 성장률 정체, 국내산업 공동화와 실업문제의 증가라는 서구가 겪었던 고전적 문제가 현재 한국에 재현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단일민족국가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전이라는 서

구적 현상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은 고도산업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현상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인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문제라기보다 세계의 보편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인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민족적이나 동시에 어느 민족 못지않게 세계화 되어있다. 한국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상이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넘어서는 세계의 이해가 필요하며 한국인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악의에 찬 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자신의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한국인은 한반도를 평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만드는 상상력의 실행과 아울러, 동아시아를 평화와 번영, 상생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꿈을 나누어야 하며 나아가 세계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당사자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디자인과 아울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치능력의 선진화, 사회정책의 선진화, 인적자원 개발의 선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과학, 문화, 개방적 시민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동아시아의 권력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중심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민주화 이후 한국의 과제라 할 수 있다.

Die Demokratie in Südkorea

Erungenschaften und offene Aufgaben

Prof. Dr. Lee Chong-Oh, Präsident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eoul

Die geschichtlichen Ursprünge der südkoreanischen Demokratiebewegung ließen sich eigentlich bis zur Widerstands- und Modernisierungsbewegung während der japanischen Kolonialzeit (1910-1945) zurückverfolgen. An dieser Stelle möchte ich mich jedoch beschränken auf die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Demokratiebewegung, die sich gegen jenes autoritäre Regime auflehnte, welches in den 1960er Jahren nach der Ausrufung der Republik Korea den Prozess zur Modernisierung und Industrialisierung des Landes anführte.

1. Industrialisierung und Demokratisierung

Seit den 1960er Jahren bewirkte die Industrialisierung Südkoreas innerhalb eines Zeitraumes von 30 Jahren ein rapides Höchstwachstum, wie es in der Geschichte der Weltwirtschaft nur selten gegeben hat. Erstaunlich sind dabei nicht nur die reinen Wachstumsraten von Bruttosozialprodukt pro Kopf und Volkseinkommen. Bemerkenswert ist vielmehr auch die in hohem Maße erfolgreiche Industrialisierung, welche Südkorea dazu verhalf, in diesem kurzen Zeitraum den Aufstieg von einem maroden, unbedeutenden Agrarstaat bis in die Reihe der weltweit wichtigsten Industrienationen zu schaffen.

Diese Veränderung betraf ebenso bestimmte tief verwurzelte Gefühle des Misstrauens, der Skepsis und der Feindseligkeit, wie sie die Koreaner seit der kolonialen Modernisierung gegenüber der Außenwelt zu hegen pflegten. Nun entstand dagegen das kulturelle Phänomen der so genannten Hallyu – einer Koreanischen Welle, womit die Verbreitung koreanischer Massenkultur ins Ausland gemeint ist. Diese Hallyu wurde zum Ausdruck der Selbstbejahung und des Selbstbewusstseins der Koreaner. Für viele Koreaner war es eine begeisterte und geradezu erfrischende Aussicht, dass Korea tatsächlich bis in die Weltspitze vordringen könnte – und das nicht nur im wirtschaftlichen Bereich, sondern auch auf dem kulturellen Sektor.¹

Eine weitere wichtige Quelle ihres Selbstbewusstseins hatten die Koreaner aber auch in ihrer Demokratiebewegung und in den Fortschritten, die hier in dieser Zeit erreicht werden konnten.

Die autoritäre Regierung, die sich dem Regime von Park Chung Hee angeschlossen hatte, war auf zunehmenden zivilen Widerstand gestoßen, so dass sie 1987 schließlich einem Übergang zur Demokratisierung zustimmte. Dieser Prozess ging zwar nur langsam voran, doch war er letztendlich nach etwa zehn Jahren erfolgreich. Nach zwei Übergangsregierungen von Roh Tae Woo und Kim Young Sam, wurde 1997 Kim Dae Jung, dem von Seiten der Demokratiebewegung am meisten Zustimmung entgegen gebracht wurde, neuer Präsident. Damit schien die Demokratisierung Südkoreas endlich vollendet. Fünf Jahre danach gewann dann Roh Moo Hyon, der ebenfalls von der breiten Masse befürwortet wurde, die Präsidentschaftswahl. Nachdem nunmehr zwei Regierungen von der so genannten „Reformdemokratie“

1. Im August 2007 verfolgte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die heftigen Diskussionen über den Massenfilm

"D WAR" des Regisseurs Shim Hyeong-rae. Es handelt sich dabei um Abgrenzung und Kritik gegenüber dem Phänomen der Massenhysterie in der südkoreanischen Popkultur, die erfolgreich auf den US-amerikanischen Verbrauchermarkt vordringen konnte. Die Diskussion hat eine gewisse Affinität mit den Kritiken über die Massenbegeisterung bzgl. Hwang Woo-suk (den Gentechnologen, Anmerkung d. Ü.) im Winter 2005.

hintereinander das Präsidentenamt übernommen haben, sieht es so aus, dass sich die Demokratie in Südkorea unumstößlich gefestigt hätte. Südkorea ist damit zu einem weltweit seltenen Erfolgsbeispiel geworden, wo eine erfolgreiche Industrialisierung und eine moderne Demokratisierung gleichzeitig vollbracht wurden.

Das einzige Erbe des 20. Jahrhunderts, das Korea noch zu bewältigen bleibt, ist jetzt die von äußeren Faktoren erzwungene Teilung. Nur wenn dieses Problem erfolgreich gelöst ist, wird Südkorea alle Aufgaben der Modernisierung und alle damit verbundenen Tragödien überwunden haben. Erst dann wird es mit der Außenwelt vollständig versöhnt sein.

2. Die Demokratie nach der Demokratisierung

Der Widerstand vom Juni 1987 löste den unmittelbaren Übergang zur Demokratie aus. Er besitzt den Charakter einer freiwilligen Bürgerrevolution, an der Studenten/innen, Arbeiter/innen, Intellektuelle und der Mittelstand auf der breiten Ebene teilnahmen. Folglich gab es keine Partei und keine politische Organisation, welche die teilnehmenden Gesellschaftsschichten und Gruppen führte und kontrollierte. Nachdem diese Welle des Widerstands im Juni über das Land gerollt war, kehrte die Masse in ihren Alltag zurück. Die Oppositionsbewegung, wie die Demokratiebewegung auch genannt wurde, zerfiel vor der großen Wahl im Dezember 1987 endgültig. Die etablierten Parteien Südkoreas hatten ihre Basis in ein paar wichtigen Gebieten des Landes. Sie nutzten die auseinander fallende Demokratiebewegung durch die Nachschubschleuse der neuen politischen Elite. Nicht nur in der demokratischen Gewerkschaftspartei und in den politischen Kräften der Regierung, die mit der Demokratiebewegung eine starke Affinität besitzen, ist eine große Anzahl von Führungskräften vertreten, sondern auch ebenfalls in der Oppositionspartei.²

2. Stellvertretende Beispiele: Der ehemalige Gouverneur von Kyeonggi, Son Hak-kyu war ein Mitglied der Partei Hannara. Nach dem Austritt aus der Partei ist er heute ein Mitglied der Panregierungsmacht. Der Gouverneur von Kyeonggi, Kim Munsu, und der Abgeordnete Yi Jae-o

Nach 1987 wurden die „Straßenkämpfe“ allmählich durch „Wettkämpfe in den Wahllokalen“ ersetzt. Der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Zustand seit 1987, häufig als „System von 1987“ bezeichnet, war ein Balanceakt eines instabilen Gleichgewichts, verursacht durch die Existenz von demokratischen und alten autoritären Kräften. Nach 1997 waren zwar die Parteien der Reformdemokratie zweimal hintereinander in der Regierung, jedoch schafften sie es nicht, das Parlament und die Kommunalregierung zu beherrschen.³ Die Bürgerrevolution von 1987 vermochte es nicht, die alten Kräfte auszuschalten. Und die neue demokratische Kraft scheiterte dabei, eine stabile politische Führung hervorzubringen.

In der Großwahl 2007 – zwanzig Jahre nach 1987 – ist die Aussicht für die alten Kräfte günstig, erneut an die Macht zu kommen. Ob man einen solchen Regierungswechsel als ein übliches Charakteristikum von Demokratie betrachten soll oder als einen solchen Sieg des Reaktionismus als Rückschritt, das bleibt ein elementarer Streitpunkt.

Letzten Endes dominieren Regionalismus und Konservatismus (so wie in hohem Maße Anti-Kommunismus) nach wie vor als herrschender Diskurs und die politischen Parteien und Diskussionen spielen in der Politik Südkoreas keine allzu große Rolle.⁴ Aufgrund einer Unterentwicklung von Parteienpolitik

waren zwei der wichtigsten Führer der Opposition und Arbeiterbewegung aus den 70ern und 80ern.

3. Die Regierung von Kim Dae Jung koalierte mit Kim Jong-Pil, dem ehemaligen Mitglied der Regierungsmacht der Park-Chung-Hee-Ära, und bildete durch die sog. DJP-Koalition die Mehrheit innerhalb des unsicheren Parlaments, wurde jedoch nach dem Zerfall der DJP-Koalition sofort zur Minderheitsregierung. Die Regierung von Roh Moo Hyun bildete durch die Gesamtwahl, die 2004 nach dem gescheiterten Anklageversuch gegen den Präsidenten durch die Opposition stattfand, zwar die alleinige parlamentarische Mehrheit, jedoch verlor sie anschließend mehrere Ergänzungswahlen, so dass sie wieder zur Minderheitspartei geworden ist. Gegenwärtig regiert die Oppositionspartei in allen Kommunalregierungen einschließlich Seoul (bis auf die Provinz Cheolla).
4. In einer der heftigsten Kandidaturwahlen (von der Partei Hannara) in der Parteiengeschichte Koreas diskutierte man vom Anfang bis zum Ende nur über die Kompetenzen von einzelnen Kandidaten, und die politischen Diskussionen hatten kaum eine Bedeutung.

und Parlamentarismus kann die koreanische Politik trotz bestehender demokratischer Institutionen ihre Rückschrittlichkeit nicht überwinden. Dies bleibt eine der größten Aufgaben der Demokratisierung, welche man in Südkorea zu lösen hat.

3. Die Auflösung des Autoritarismus und die Entwicklung eines Friedenssystems

Unter den vier Regierungen nach 1987 bemühte man sich, mit unterschiedlichem Tempo und Intensität, die autoritären Strukturen aufzulösen und den Zustand des Kalten Krieges endgültig durch ein Friedenssystem zu ersetzen. Das wurde während der Amtszeiten von Roh Tae Woo und Kim Young Sam im beträchtlichen Maße erreicht, und anschließend durch die Regierungen von Kim Dae Jung und Roh Moo Hyun ausgebaut. Die Progressiven fordern zwar noch vehement die Abschaffung des alten ‚Staatssicherheitsgesetzes‘, für das noch keine Alternative geschaffen wurde. Dennoch gibt es keine Zweifel, dass Südkorea in die Liga der fortschrittlichsten Verfassungs- und Menschenrechtsstaaten der Welt aufgestiegen ist. Insbesondere hatten die beiden Regierungen von Kim Dae Jung und Roh Moo Hyun die Machtbefugnis des Geheimdienstes und der Geheimpolizei weitestgehend eingeschränkt und Machtmissbrauch unter Strafe gestellt. Illegale Abhörung hielt man bislang in Südkorea für selbstverständlich, deshalb ist es ein positiver Präzedenzfall, dass die Regierung Roh Moo Hyuns ehemalige Chefs von Geheimdiensten deswegen zur Verantwortung gezogen und rechtlich verurteilt hat.

Ferner begann man mit Wirtschaftshilfe für Nordkorea in großem Umfang, und mit Verständigung auf Regierungs- und Bevölkerungsebene. Diese ‚Politik der Versöhnung und der Zusammenarbeit‘ erreichte im Gipfeltreffen von Nord- und Südkorea am 15. Juni 2000 einen Höhepunkt. In der darauf folgenden ‚Politik des Friedens und Prosperität‘ von Roh Moo Hyun zeigte sich, dass man die Forderungen des demokratischen Lagers, die nationale Frage flexibel und friedlich zu lösen, aufgenommen hatte. Ob sich diese

Tendenz nach den Großwahlen 2007 wohl ändern wird? Dies befürchten viele. Doch wird es nicht sehr einfach sein, gegen die in der Welt und in Ostasien vorherrschenden Strömungen, also innenpolitisch gegen die Demokratisierung und außenpolitisch gegen die Auflösung des Kalten Krieges, anzuschwimmen.

4. Die Suche nach fortschrittlichen Alternativen

Es gibt sehr unterschiedliche Methoden für die Regulierung gesellschaftlicher Konflikte und der sozialen Wirtschaftspolitik. In Südkorea stellt sich für die Regierungen seit der Demokratisierung in der Tat weniger die Lösung des Atomproblems Nordkoreas als die größte Schwierigkeit dar, sondern vielmehr das Problem der Steuerung gesellschaftlicher Interessenkonflikte und die Einrichtung entsprechender Institutionen für eine soziale Wirtschaftspolitik.

In einem gewissen Maße scheint es unvermeidbar, dass unter den neuen Verhältnissen, wie sie durch die Auflösung bzw. Verkleinerung der autoritären Staatsorganisationen und durch die Solidierung von Konstitutionalismus und parlamentarischer Demokratie entstanden sind, nun alle möglichen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Forderungen aufgebracht werden, und zwar mit einer Radikalität, die der vorherigen Unterdrückung durch die autoritäre Macht entspricht. Selbstverständlich geschah es nun im Falle Korea nicht, dass durch diesen übermäßigen Ausbruch lang unterdrückter Forderungen Staat und Gesellschaft in einen Zustand der Regierungslosigkeit gestürzt worden wären.

Jedoch entstehen erfahrungsgemäß bei allen Auflösungsprozessen von autoritären Strukturen politische bzw. gesellschaftliche Kosten. Hierfür muss auch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gerade stehen. Insbesondere ist nun im Konflikt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ein kritisches Niveau erreicht. Die Frage stellt sich, ob die südkoreanische Gesellschaft im Stande ist, solche gesellschaftliche Kosten zu tragen. Sehr problematisch ist zudem, dass die Mehrheit der Bevölkerung diese Übergangsphase als all zu lang empfindet. So sieht sich die Gewerkschaft Hyundai Automobil, eine der repräsentativen Arbeitergewerkschaften und seit 1987 stetiger Organisator von

Arbeitskämpfen, nach ihrem Streik Anfang 2007 nunmehr heftigen Beschimpfungen der Bevölkerung ausgesetzt. Ebenso vermochte der Minju noch'ong (Dachverband der demokratischen Arbeitergewerkschaften) mit seinem politisch orientierten Generalstreik gegen das Freihandelsabkommen zwischen Südkorea und den USA kaum positive Reaktionen auf gesellschaftlicher Ebene hervor zu rufen. Die Südkoreaner sind traditionell eine homogene gemeinschaftliche Ordnung gewohnt. In der Moderne wurde diese dann in eine autoritäre Struktur abgewandelt. So sind Erfahrungen und Methoden, dieses klassische Problem von Interessenkonfrontation zwischen Individuen und Gemeinschaft zu lösen – wofür die Konflikte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ein typisches Phänomen darstellen –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immer noch reichlich fremd. Die Zeitung Hangyore berichtete ihren Lesern/innen, wie die französischen Bürger/innen die Unannehmlichkeiten eines Arbeitsstreiks ohne Weiteres akzeptierten. Jedoch werden derartige aufklärende Bemühungen nur widerstrebend aufgenommen. Sollte sich allerdings das frontale Verhältnis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wie es gegenwärtig besteht, als genauso unfruchtbar erweisen wie die in der Vergangenheit praktizierte autoritäre Form der Zusammenarbeit, dann muss man in gesellschaftlichem Dialog ein langfristig funktionierendes Verhältnis beider Parteien mit den nötigen Kompromissen konstituieren. Dies gilt eigentlich für gesellschaftliche Interessenkonflikte auf allen Ebenen, wie etwa bei den jeweils divergierenden regionalen Entwicklungen oder bei Konflikten bezüglich des Umweltschutzes. Auch wenn man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eigentlich das Prinzip von Dialog und Kompromiss zu achten meint, so kommen doch wahrer Dialog bzw. tragende Kompromisse kaum zustande. Letzten Endes muss fast jeder gesellschaftliche Vorschlag auf ein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hofs warten. Dialog und Kompromiss funktionieren nicht als institutionelle Instrumente für die Schlichtung gesellschaftlicher Konflikte und Streitigkeiten. Zum gängigen Instrument der Konfliktregulierung ist vielmehr die Justizmacht geworden, in Ersatz zur unterdrückenden Staatsmacht der Vergangenheit.

Südkorea muss bezüglich Einführung demokratischer Einrichtungen auf

eine reifere Stufe sozioökonomischer Demokratie steigen, und zwar im Sinne einer Kultivierung von Politikkompetenz. Damit Systeme erfolgreich funktionieren können, die eine rationale Regulierung der sozioökonomischen Interessenverhältnisse innerhalb der politischen Demokratie ermöglichen. Entsprechende alltägliche Fähigkeiten und gesellschaftliche Bedingungen müssen gefördert bzw. geschaffen werden, damit aus der Demokratisierung Demokratie entsteht und Südkorea das ‚87er System‘ auf fortschrittliche Weise überwindet.

Man könnte schließlich einen Korea spezifischen Entwurf eines sozioökonomischen Systems in Form von Gesellschaftsintegration kompilieren. Gegenwärtig können in diesem Zusammenhang drei Modelle betrachtet werden: das angloamerikanische, das kontinentale sowie das nordische Modell. Die konservativen Theoretiker interessieren sich mehr für das angloamerikanische Modell. Die Progressiven wägen zwischen dem Kontinentalen und dem Nordischen ab. Zu den Erfolgsbeispielen für das angloamerikanische Modell zählt Irland, für das kontinentale die Niederlande und für das nordische Dänemark und Schweden. Selbstverständlich wird dabei auch das deutsche Modell als eines der kontinentalen Modelle gewissenhaft geprüft. Wenn ein sozialdemokratisches Modell des 21. Jahrhunderts gefunden werden könnte, welches auf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angewandt werden könnte, würde es sicherlich überaus große Resonanz finde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dürstet nach einer progressiven Alternative. Sollte eine solche nicht vorgeschlagen werden, wird sie sich für ein konservatives System entscheide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steht am Scheideweg zwischen einer konservativen oder einer fortschrittlichen Revision des ‚87er Systems‘.

5. Der Frieden und die Prosperität Nordasiens

Die Demokratisierung von 1987 in Südkorea vollzog sich zwei Jahre vor dem Mauerfall von Berlin. Es war der erste Zusammenbruch einer Ordnung des Kalten Krieges. Anschließend folgten die ‚Politik der Nordregion‘ der Regierung Roh Tae Woos und die ‚Sonnenscheinpolitik‘ der Regierung Kim Dae Jungs. Sie konnten sich allerdings nur durchsetzen, weil eine

wirtschaftliche Grundlage vorhanden war. Eben diese wurde durch die Verankerung der Demokratie – also dank des Widerstands vom Juni 1987 – sowie gleichzeitig durch die erfolgreiche Industrialisierung geschaffen. Seit den 60er Jahren wurde die Industrialisierung durch die autoritäre Regierung forciert, fundamental beeinflusst vom Prinzip des Kalten Krieges, den Systemwettbewerb zu gewinnen, Nordkorea auf die Plätze verweisen zu müssen. Dies wurde unglaublich aggressiv und mit militärischen Mitteln vorangetrieben, wobei allgemeinen Werte von Demokratie, Menschenrechten etc. schwer verletzt wurden. Es entstand eine staatlich gelenkte Marktwirtschaft. Seit der Demokratisierung 1987 versuchte man dann langsam aber stetig eine Wiederherstellung der verletzten Werte. Man wollte Heilung von den Schäden, die unter dem Vorwand von Staatssicherheit und Wirtschaftswachstum verursacht worden waren. Die staatliche geführte Marktwirtschaft hatte zwar in einer Höchstwachstumsphase recht erfolgreich funktioniert, doch seit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die Globalisierung stärker in den Vordergrund drängte, konnte sich das alte System nur schwer an diese neuen Umstände gewöhnen. Schließlich übernahm Korea nach der Devisenkrise von 1997 (einer asiatischen Wirtschaftskrise) den neoliberalen Global Standard, d.h. die neoliberale Marktwirtschaft. Wie für die SPD Deutschlands stellte auch für die reformdemokratischen Kräfte Südkoreas die Frage, wie man auf die konservative Strömung des Weltkapitalismus nach 1990 reagieren soll, eine enorme Herausforderung dar. Nach 1997 reagierte die Regierung der Reformdemokratie gegenüber Problemen der neoliberalen Globalisierung und der gesellschaftlichen Polarisierung mit einer Öffnung des Marktes und einer Verschärfung der Regulierung einerseits und mit einer aktiven Einführung von sozialer Wohlfahrtspolitik andererseits. Die Politik der Öffnung des Marktes erschien insbesondere in Form des Freien Handelsvertrag (FTA) mit den USA, den die Linken energisch zu sabotieren versuchten. Dagegen provozierte die Einführung der sozialen Wohlfahrt besonders die Ressentiments der Rechten. Durch die Marktöffnung entstanden im Bereich der Landwirtschaft sowie in der Leichtindustrie Schäden, die wiederum durch finanzielle Fördermittel entschädigt werden mussten. Außerdem stieg der Bedarf an Finanzmitteln im Bereich der sozialen

Absicherung, einschließlich der Renten, rapide an. Vor allem aber wächst der Etat für die Unterstützung Nordkoreas stark, so wie es im deutschen Prozess der Wiedervereinigung der Fall gewesen war, nur dass sich Korea noch im Vorstadium der Wiedervereinigung befindet. Je nachdem, mit welcher Geschwindigkeit eine Verbesserung in den Beziehungen beider Koreas eintritt, wird hier in Zukunft sicherlich ein wesentlich höherer finanzieller Posten zu erwarten sein. So entsteht durch die soziale Wohlfahrt und die Unterstützung für Nordkorea neuer Finanzbedarf in riesigem Umfang. Und auf der anderen Seite ist Südkorea seit 2000 nicht mehr ein Staat, der eine der höchsten Wachstumsraten aufweisen kann. Es gibt gegenwärtig in Südkorea die selben klassischen Probleme, unter denen auch der Westen leidet, d.h. Stillstand der Wachstumsrate auf Grund des Wettbewerbs mit China und Südostasien, Auswanderung der Industrie, Zusammenschlüsse inländischer Industrien und der Zuwachs von Arbeitslosen. Außerdem steigt neben den Arbeitslosenquoten zunehmend auch die Zahl der Arbeitsmigranten. Dadurch gibt es einen allmählichen Übergang vom mono-ethnischen Staat hin zu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Das gleiche Phänomen also, welches auch im Westen zu beobachten ist.

Südkorea erlebt dieselben soziokulturellen Erscheinungen, wie sie andere hoch industrialisierte Staaten durchmachen. Gegenwärtig sind die Koreaner/innen weniger mit ihren spezifischen Problemen konfrontiert, sondern eher mit allgemeinen Problemen der Welt. Man ist stolzer auf die eigene Nation⁵ als in jedem anderen Land der Welt. Gleichzeitig ist Südkorea genauso stark globalisiert wie viele andere Nationen. Die Industrialisierung und die Demokratisierung, worauf die Koreaner/innen stolz sind, sind jedoch gegensätzlicher Ausdruck zum Nationalismus und Patriotismus. Nun ist es notwendig, ein Verständnis für die Welt zu entwickeln, welches über Nationalismus und Patriotismus hinausgeht. Und die Koreaner/innen sollten die Welt nicht mehr als Gegner betrachten, als sei sie voller böser Absichten,

5. Im Original heißt es 'nationalistischer'. Aufgrund der negativen Konnotation im Dt. ist es sinnbildlich übertragen. (Anmerkung d. Ü.)

sondern eher als ihren eigenen Raum, in dem sie selbst aktive Mitglieder sind.

In erster Linie sollten die Koreaner/innen ihre Vorstellungen vom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er Gestaltung dieses Raumes umsetzen. Sie sollten den Traum teilen, dass sich Nordostasien hin zu Frieden, Wohlstand und zu einer solidarischen Gemeinschaft entwickelt. Ferner müssen sie sich mitverantwortlich für die Lösung der Probleme auf der Welt fühlen. Dafür sollte man die Fähigkeit entwickeln, ein beispielhaftes Zukunfts-Design zu entwerfen und es gleichzeitig konkret umzusetzen. Es wäre ein Fortschritt, welcher politische Fähigkeit, Sozialpolitik und die Entwicklung von Humankapital vereint. Korea muss zum Zentrum von Wissenschaft und Kultur werden, und zur offenen Zivilgesellschaft Nordostasiens. Es besitzt gute Voraussetzungen, dieses Ziel zu erreichen und umzusetzen. Es ist, nach der Demokratisierung, nun die Aufgabe Südkoreas, sich nicht als Macht Nordostasiens zu etablieren, sondern ein Zentrum für Frieden und Prosperität aufzubauen.